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연구*

—〈한겨레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현진**

민주주의의 요체가 선거에 의한 부단한 권력교체에 있다면 그 중심에 정당이 존재한다. 최근의 탈(脫)정치 혹은 반(反)정치가 전세계적인 시대의 추세를 이루고 있는 배후에는 정당정치의 부실과 부진이 놓여 있다. 우리의 경우 자본주의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계급적·집단적·부문적 분화를 수용할 만큼 정당정치의 대중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도 못하며, 그것마저도 이념이나 정책에 따른 차별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상 한국의 정당은 진보 대 보수라는 대치선에서 그 이념과 정책을 가르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전쟁과 분단에 따른 반공 이데올로기의 경직성과 성장과 안보의 미명 아래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의 출몰이 선거와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의 대의성을 왜곡하여 왔다면 보수일변도의 기형적 정당구조가 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은 단순히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운동권에 의한 정치세력화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그리고 사회적 대중기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중도통합적인 정당이 보편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아래에서, 한국은 이데올로기 투

*본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선도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서울대 사회학과와 정창기, 정은미에게 감사를 드린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관심분야는 사회발전론, 비교사회학, 정치사회학이다. 주요저서로 《21세기 한국사회의 안과 밖: 세계체제에서 시민사회까지》, 서울대출판부, 2000; 《비교사회학》, 나남, 2000; 《지구시대 세계의 변화와 한국의 발전》, 서울대출판부, 1998; 〈한국의 발전경험과 '성찰적 근대화': 근대화의 방식과 근대성의 성격〉, 《경제와 사회》, 1999, 4;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현실과 과제〉, 《통일연구》, 1999, 4; 〈근대화를 통해 본 동아시아의 발전: 신화와 현실〉, 《정신문화연구》, 1998, 4 등이 있다(연락처: 02)880-6412, E-mail: hclim@plaza.snu.ac.kr).

쟁이 청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파할 진보-보수 정당체제를 가지지도 못했고 또한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권으로서는 지난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사회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진보정당의 구축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운동권으로서는 '사회세력'으로서 독자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만족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정치를 넘어 신정치를 향한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21세기를 맞이한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넘어 공고화를 달성하는 데 있다. 제3차 민주화 국가들 중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성공한 사례로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세 나라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실제로 한국정치는 아직도 위로부터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밑으로부터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 서로 조화되지 못하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에게 불신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질 높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포용(inclusion)과 경합(contestation)이 모든 사회세력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수준에서조차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나 환경, 여성, 인권으로 상징되는 신·구 사회운동에 기반한 새로운 정당의 형성과 존립이 두 차례에 걸친 민간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잘 입증된다.

민주주의의 요체가 선거에 의한 부단한 권력교체에 있다면 그 중심에 정당이 존재한다. 최근의 탈(脫)정치 혹은 반(反)정치가 전세계적인 시대의 추세를 이루고 있는 배후에는 정당정치의 부실과 부전이 놓여 있다. 이는 정당정치가 사회성원들의 다양한 이해 결집을 통한 민의 대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자본주의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계급적·집단적·부문적 분화를 수용할 만큼 정당정치의 대중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그것마저도 이념이나 정책에 따른 차별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정당들은 전국적 기반을 갖는 대중정당이 아닌 엘리트정당으로서 ‘중도통합적’ (catch-all)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미숙아이다. 그러기에 군부 및 민간 정권의 부침속에서 지역성을 갖는 ‘오너’ (owner) 중심의 일인보스 정치를 통해 바탕색과는 무관하게 끊임없는 ‘헤쳐모여’를 통해 생성과 해체와 통합을 거쳐왔다. 반세기에 걸친 헌정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석자를 온전히 유지해온 정당이 없다는 기현상(?)에서 한국 정당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엿볼 수 있다.

사실상 한국의 정당은 진보 대 보수라는 대치선에서 그 이념과 정책을 가르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정당만 존재하는 정당구조아래에서 정책토론 보다 수와 힘의 대결이 횡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전쟁과 분단에 따른 반공 이데올로기의 경직성과 성장과 안보의 미명아래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의 출몰이 선거와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의 대의성을 왜곡하여 왔다면 보수일변도의 기형적 정당구조가 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의 형성과 건설에 대한 노력과 분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운동권에 의한 진보정치를 향한 시도가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과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졌었고 또한 민주화 이후에도 그 노력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진보정치를 향한 시도는 합법 정당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1950년대의 <진보당>, 1960년대의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통일사회당>, <민주사회당>, <사회당>,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한겨레당>, <민중의 당>, <민중당>, 그리고 1990년대의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을 들 수 있다.¹⁾

이 연구는 <한겨레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네 사례에 주목한다. 이 네 정당은 1980년대 말 이래 이루어진 민주화 이행 국면에서 시도된 사회운동권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일종의 실험으로서 이념과 노선과 지향에서 서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바탕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개혁 혹은 사회주의의 수용과 같이 이념과 사상에서 좌파와 중도 노선으로 갈라지며, 그 세력 기반이 민중 혹은 시민 진영으로 나뉘어지고, 나아가 정당건설에서도 독자정당을 추구하거나 기존 야당과 제휴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왔다.

1) 한국정치에서 지하당이라는 비합법적 공간을 통한 진보정당 건설의 시도도 있어 왔다. 통혁당과 인혁당이 그 주요 보기이다(조희연, 1993 참조).

따라서 필자는 한국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운동권에 의해 이루어진 진보적 성향을 갖는 정치세력화를 정당 건설이란 측면에서 분석하려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 정당정치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안팎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둘째, 국가,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의 관계 틀 안에서 진보정치의 위상을 자리 매김하고, 셋째, 진보정당이 추진된 정치사회적 환경, 추진세력과 주체, 조직구조와 이념지향, 정강·정책의 내용, 선거결과와 향후 추이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운동권의 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연관된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및 사회적 대중기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한국정치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는 포용과 경합의 정치가 사회전반에 착근되는 것이 그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민주주의란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회세력이 선거라는 경쟁의 장에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세력의 이해가 정당정치를 통해 대변될 때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갖추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여러 계층, 지역, 세대, 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이해를 흡수해 줄 진보 대 보수의 정당정치가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민중진영뿐 아니라 시민진영과 같은 사회운동권으로부터의 진보정당 형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그 미래 방향을 내다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사회운동의 도전과 좌절을 통해 본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과 문제점

한국에서 정당의 기원은 조선왕조 시대의 붕당(朋黨)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아래 식민지 통치 기간을 지난 해방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일제치하에서 민족독립을 위한 여러 노선의 정당 형성을 목격할 수 있으나, 미국과 소련의 점령 아래에서 비교적 활발한 정당활동이 이데올로기상 좌우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남한의 경우 다원주의 정당정치를 이상으로 한 미국 군사정부의 기본 정책의 영향으로 실로 수많은 정당이 출현, 명멸했다. 1947년 6월 제2차 미소공위에서 '정당·단체'의 자격을 소련은 10,000명 이상 반면 미국은 1,000명 이상으로 규정

하였는 바, 전자의 기준으로 만으로도 무려 422개가 등록되었으며 만일 후자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수효는 1,000개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승훈, 1993: 185).²⁾ 이러한 정당의 난립 현상에 대해 라우터백은 “한국인들은 낮에나 밤에나 정치를 논하였다. … 한국인들은 두 사람이라도 식탁에 마주 앉으면 신정당단체를 만든다”고 야유하였다(Lauterbach, 1948: 46).

물론 이러한 정당·단체들을 모두 정당으로 볼 것인가는 회의적이다. 서구의 경험에서 보면 정당이란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기반으로 정당·정책의 구현을 통해 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움으로써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당은 최소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장기간의 안정적 조직유지, 중앙과 지방조직의 영향력 행사, 유권자의 지지획득, 충원구조의 합리화(LaPalombara and Weiner, 1966: 6), 둘째, 밑으로부터의 뿌리조직, 전국 및 지역 수준에서 활동, 지지기반의 확고한 유지(Janda, 1970: 104-12) 등. 해방공간의 정당들 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만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일종의 소규모 과두지배 집단으로서 파벌, 결사, 종파에서 출발한 일종의 ‘종이정당’이라 하겠다.

해방이후 사회지형은 대단히 복잡했다. 개항이후 여러 가지 신사조의 수용과 일제 식민지체제 아래에서의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 노선이 해방공간에서 합류하면서, 실로 다양한 이념과 사상들 — 자유주의, 평등주의, 공화주의, 무정부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 이 격돌하였던 것이다. 이 중에서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의 심대한 영향으로 정당형성이 주로 좌우 이데올로기를 기본 축으로 하여 대체로 일제하의 민족주의 세력은 <한국민주당>으로 결집되었고, 사회주의 세력은 <조선공산당>으로 연결되었다(김재홍, 1992: 35). 당시 해방조선의 사회구조와 경제발전과 정치문화의 수준으로 볼 때, 정당의 형성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그에 연관된 인사들에 의해 위로부터 주도된 ‘정당 이전의 정당’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 인해

2) 애초에 참가 청원서를 제출한 정당, 단체의 수는 남한 425개, 북한 38개 도합 463개였으며(최장집, 1989: 126), 이중 가장 큰 정당은 한국당으로 86만명의 당원을 신고하였고, 가장 작은 단체는 조선 애국자구호동맹의 22명이었다. 남조선 민전은 620만명과 남조선부녀총동맹은 450만명을 보고하였는데, 이렇듯이 당시 등록된 정당 및 사회단체의 총 인원수는 당시 남북한 인구 2,000만의 세 배가 넘는 7천만명이었다(송남현, 1980: 399-400; 최장집, 1989: 153).

전체인구의 90%가 농민이었고, 대부분의 국민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수용하기에는 교육의 보급이 미미했으며,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선거·투표·정당에 관해서는 국민적 이해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좌우정당의 출현을 가져온 것은 자본주의적 계급분화와 무관한 국제헤게모니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첨예한 이해대립의 결과라 할 수 있다.³⁾

서구의 정당사는 정당의 발전이 엘리트정당(elite party)－대중정당(mass party)－중도통합정당(catch-all party)－카르텔정당(cartel party)의 순서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⁴⁾ 엘리트정당은 소수의 주도에 의해 위로부터 만들어진 초기 형태의 정당으로서 전국적 수준에서의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조직화도 소규모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형태를 띤다. 거의 모두 엘리트정당으로 출발한 서구의 정당들이 그 실례이다. 이와 달리 대중정당은 그 출발이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도 지지기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중적인 풀뿌리를 갖게 되며, 고유한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유권자와 항시 접촉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반영구적인 정당으로 존속한다. 영국의 노동당이나 보수당이 좋은 보기이다. 중도통합정당은 대중정당의 변신으로 전국적 대중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른바 ‘선거주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정 이념이나 특정 계급의 이해를 넘는 정강·정책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의 유럽의 사회당이나 사회민주당은 대체로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 ‘포괄적인’ 색채를 띄고 있으며,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사이의 특징이 없어지는 것도 중도통합정당의 맥락에서 접근 가능하다. 카르텔정당은 기존의 정당들이 서로간의 이념적 색깔이 무너지면서 집권을 위해 정강·정책이 서로 다른 정당과 제휴하는 경우로서, 이들은 과점체제아래 새로운 사회세력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독일의 경우 사회민주당, 기독교사회당, 녹색당 사이의 연정이 대표적인 보기가 된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들은 대체로 특정인의 카리스마에 근거하는 엘리트정당으로서 본질적으로는 대중정당 이전의 잡종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김용호, 2001: 299; 장훈, 1995: 58-63). 정당의 형성이 특정 인사에 위해 주도되고, 최고지도

3) 이러한 상황에서 좌우합작운동이나 이른바 ‘중간파’의 입지는 작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한반도에서 좌우 이데올로기에 의한 ‘극단의 정치’를 가져오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홍(1992)의 제3절을 볼 것.

4)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라. Sartori, 1968, Kirchheimer, 1960, Katz and Mair, 1995.

자가 바뀌면 정당이 사라지고, 지지기반이 일정 지역에 한정되며, 이념과 정책의 차원에서 정당의 바탕색이 옅으며, 유권자보다 선거를 주로 의식하며, 서로의 이해를 위해 합당과 야합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된다. 권위주의 시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겪으면서도 우리 정당들은 아직도 일인 창당지도자의 '사당(私黨)'이며, 그를 따르는 중간보스를 중심으로 한 '붕당'의 범위에서, 특정 지방을 볼모로 하는 '지역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이후 자본주의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다양한 계급적·집단적·부문적 이해를 수용, 집합, 대변하기에는 정당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비어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격화된 이데올로기 대립은 정당 형성의 기반을 이념이나 정책 보다 인물이나 파벌에 두게 함으로써 좌우 대치선에 입각한 정당활동을 저해해 온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우리의 정당들이 대부분 보수지향의 정당으로서 지지기반과 정책지향에서 이념적 지향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 한국 정당체제의 특징이라 할 '좌파배제-우파독점'의 현상이 그 결과이다.

한국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것은 그 생애주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당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성경룡(1993: 64, 66-67, 76)의 연구에 의하면,⁵⁾ 정당의 설립은 정치적 격변기에 두드러졌고 그 다음은 선거기간이었다. 해방공간, 4·19학생의거 이후 5·716쿠데타 이전, 전두환정권 말기와 같이 정치적 격변기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선거 기간에 주로 정당들이 출현했던 것이다. 정당의 평균 지속기간은 약 31개월로서, 과반수의 정당들이 15개월 이하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들은 국가 억압력이 약화되는 탈권위주의 시기에 폭발적으로 출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존속하다가, 국가 억압력이 강화되는 재권위주의 시기에 급속하게 해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파 정당일수록 해산한 경우가 많았다면, 좌파 정당일수록 합당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⁶⁾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이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지난 권위주의 시절 억압적인 국가의 취약한 정당성에 도전함에 있어 정당형성의 기초라 할 대중조직과 정책기조가 상당히 허약했음을 가르쳐 준다.

5) 해방이후 존재했던 수 많은 정당들 중 군소정당을 제외한 500여개 가운데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는 114개를 추출하여 설립과 해체를 분석하고 있다.

6) 114개 정당들 중에서 우파 74개 좌파 40개의 표본이 제시되었으나, 여기서 좌파 정당은 주로 해방공간에서 활약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당체제 면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정당다원주의를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용호(2001: 26-28)는 이를 '제한된 정당다원주의' (limited party pluralism)라고 명명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당체제 아래에서는 정당, 선거, 국회 등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법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그것들의 자율적 활동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정치엘리트들은 권력게임에 몰입하면서 수시로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국민대중의 전체 이익과 유리된 상태에서 서로간에 협상과 조정을 하곤 한다.

실제로 정당다원주의는 이승만정권을 통해 좌절되면서, 제1공화국의 자유당, 제3-4공화국의 공화당, 제5공화국의 민정당과 같이 일당우위적 지배정당에 의해 움직이는 '패권적 정당체제' (hegemonic party system)의 모습을 보여 왔다. 1987년 시민항쟁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당다원주의가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6공화국에서의 '3당합당'이나 김대중 정부에서의 '3당야합'에서 나타나듯이 집권여당에 의한 정당체제의 패권적 지향은 그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며 체제화 수준이 매우 낮다(김용호, 2001: 297-301). 창당지도자의 정치생명을 넘어 정당이 유지된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대표적인 보기로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지난 10년여간 세 번에 걸친 대선에서 동일한 정당이 지속적으로 선거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우리의 정당은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당의 운영이 지역패권을 지닌 일인 오너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후보공천과 같은 의사결정이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비민주성을 나타낸다. 당의 공식기구인 형식상 존재할 뿐 당원의 의사를 집약하거나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에는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국회운영에 있어서 그러한 사당적 요소로 인해 당은 정부에 예속되어 자율성이 현격히 떨어지곤 한다. 물론 3권분립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기능은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 아래에서의 당정협의회는 행정부의 독주와 국회의 기능 약화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비대화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3.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1) 사회운동과 진보정치

사회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그것이 항시 기존 권력의 잘못된 정당성에 도전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조직들은 국가에 대한 압력집단 혹은 정당결성을 통해 정치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왔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사회운동의 정치참여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반면, 제3세계의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는 사회운동의 정치참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해방이후 무수한 정당들이 명멸하여 왔으면서도 보수-진보의 정당 정치의 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은 국가로부터의 탄압과 감시아래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나름대로 큰 공헌을 해왔다. 이승만독재에 대한 항거로서 4·19 학생혁명, 박정희체제 아래의 학생·노동운동, 부산시민항쟁, 신군부에 대한 광주민주화운동 및 시민항쟁, 민간정부 아래에서 시민단체들에 의한 낙천·낙선운동 등 적지 않은 실례를 열거할 수 있다. 우리의 사회운동은 일천한 역사 아래 조직이나 성원이나 재정 면에서 집합적 능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 담론-대안 정치'의 의미를 일깨워 주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국의 사회운동권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보수일변도의 정당정치로 인해 우리 사회 안의 개혁 내지 혁신 세력들은, 한편으로 국가권력의 부당성에 맞서 시민사회 안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독자적인 정당형성을 통해 정치사회에 도전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왔다. 해방이후 진보정치를 위한 사회운동권의 지속적인 시도는 정당결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주목할 만 하다.

해방정국의 여러 진보정당들(김남식, 1984; 서중석, 1991; 심지연, 1991 참조), 1950년대의 <진보당>(권대북, 1985; 정태영, 1995; 서중석, 2000 참조), 1960년대의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민주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1990년대 전후의 <민중의당>, <한겨레당>, <민중당>(현재호, 1996; 박상병, 1997 참조),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임현진, 2000 참조) 등이 그 중요 보기이다. 이러한 진보정당들은 사상 면에서 내포와 외연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남과 북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대안적 이념과 체제로서 사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체제개혁 내지 혁파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대강의 유사점을 지닌다(손호철, 1999: 340).⁷⁾

진보정당들 중에서 비교적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진보당>과 <민중당>이다. 권대복, 정태영, 서중석 등의 연구들은 <진보당>이 등장하게 된 정치적 조건, 정강·정책 분석을 통한 이념적 지향과 정당적 성격, 진보정당사에서의 그 위상 등을 면밀히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당>의 위상과 성격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등장과 성장과 해체를 한국의 정치사회라는 보다 넓은 거시 환경에 위치 지울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보수정당을 포함하는 정당정치 맥락에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그 위상과 성격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중당>에 대한 현재호, 박상병의 연구들은 그것이 태동하게 된 정치사회적 조건과 그것의 이념적 지향뿐만 아니라 정당지도부의 정세 인식, 대응전략, 내부갈등에 주목함으로써 그것이 선거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져온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진보정당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좌파적 진보정당의 시각에 의해 <민중당>의 성패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정당정치사에서 그것이 지니는 한계를 찾아내는 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한겨레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민주노동당>에 관해서는 그것의 활동과 가능성에 연관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한겨레당>과 <개혁민주당>에 관해서는 연구조차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유실되고 있는 형편이다.

서구의 경험은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가 정당정치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구 사회운동세력이라 할 노동운동이 사회당으로 그리고 신 사회운동세력이라 할 환경운동이 녹색당으로 전화된 것이 그 증거이

7) 진보정당들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보다는 주로 해방정국이나 1950년대에 관심의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연고로 인해 1960년대와 1990년대에 있었던 진보정당 형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아직 공백으로 남아 있다. 또한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시도되었던 여러 갈래의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다.⁸⁾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운동권에 의한 정치세력화의 시도는 있었지만 그것이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점에서 그러한 정치세력화의 성과를 나누는 주요 작용변수를 찾아보는 것은 한국 정당정치 활성화와 아울러 질 높은 민주주의를 향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에서 진보정당 형성과 좌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사회의 맥락에서 그것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균열이라 할 지역대립, 계급갈등, 세대갈등, 성차별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전체사회적 틀 안에서 정당정치에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진보정당을 특정 계급노선을 견지하는 민중진영의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적 일반이해를 옹호하는 시민진영의 정당을 모두 포함시킨다.⁹⁾ 그리고 진보정당의 형성을 기존 정당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생정당과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외생정당으로 구분한다(Duverger, 1976: xxiv-xxvii). 이를 도해하여 〈한겨레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의 특징을 알아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이데올로기 상황, 정치사회 환경, 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진보정당의 기성 정치권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선거참여를 통한 〈한겨레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의 도전과 실패가 이를 잘 웅변해 준다. 이러한 악조건아래에서 정체성과 대중성을 조화하여야 하는 '선거주의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진보정당의 실정이다. 더욱이 외생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은 기존 정당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뿐만아니라 그 모태가 되는 사회운

〈표 1〉 네 가지 진보정당의 특징

	민중진영	시민진영
내생정당	(1)	(3)
외생정당	(2)	(4)

주) (2): 〈민중당〉, 〈민주노동당〉 (4): 〈한겨레당〉 (3)과 (4) 사이: 〈개혁민주당〉

8)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나와 있다. 예를 들어, McAdam, McCarthy and Zald, 1996; Giugni, McAdam and Tilly, 1998 등 참조.

9) 사회운동권에서 민중진영과 시민진영 사이의 간격은 그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불신으로 인해 매우 크다. 그러나 시민진영을 보수적이라고 재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진영을 급진적이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단순 논리임은 분명하다.

동권을 의식하여 특정 가치를 고취하려는 나머지 '의식' 보다 '이념'에 충실하기 때문에 원내교두보 확보가 그리 쉬운 편이 아니다. 체제타협보다 체제부정형으로서 진보정당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대목이다.

2) 국가,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권은 이미 하나의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날카롭게 지적한 대로 민주주의란 본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다시 지배받는" (ruling and being ruled in turn) 모순을 지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대표성이 위로부터의 책임성에 의해 뒤받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정치는 대표성의 왜곡뿐만 아니라 책임성의 방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비단 권위주의 시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의 진전이 상당히 이루어진 작금에도 '제왕적' 대통령 아래 입법·행정·사법 권한이 집중되고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해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와 포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임민주주의' (delegative democracy)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기존의 정당정치에 의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대의성의 대행'을 사회운동이 대신하게 되었던 것이다(조희연, 1999: 330). 이점에서 사회운동권을 '준정치세력'이라고 규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박형준, 1993).

사회운동이 지니는 정치지향성은 우리만의 특징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운동에 의한 정치참여가 법·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¹⁰⁾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회운동집단들이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구에서는 사회운동집단들이 기존 정당과 정책연합도 추진할 수 있다. 민주주의 심화 과정에서 서구나 미국의 경험은 사회운동의 현실정치 진입이 통합적 일부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운동과 같은 구 사회운동세력이 노동당의 형태로 피지배계층의 이해 대변에 중

10) 사회운동집단들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를 맞이하여 50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에 의한 낙천·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이 선거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2000년 2월 개정된 선거법(87조 선거운동금지조항, 59조 사전선거운동관련조항)은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내지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낙천대상자 명단 발표와는 달리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를 선거기간 전일까지 불허하고 선거운동 기간중 낙선을 위한 가두행진, 서명운동, 피켓시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추적 역할을 했다면, 환경운동과 같은 신 사회운동세력은 녹색당의 형태로 다계급적 공동이익의 증진에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구 사회운동이 정치체제 내부를 겨냥하여 권력획득을 시도한 반면 신 사회운동이 그 바깥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정치과정의 제한성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사례의 정당정치적 역학은 매우 다르다(Offe, 1990: 232-234).¹¹⁾ 이는 개혁이나 혁명을 내걸은 전자의 경우가 거대정당으로 전개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러한 적극적인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고 성, 세대, 인종 등 차이의 정치를 지향한 후자가 군소정당으로 머무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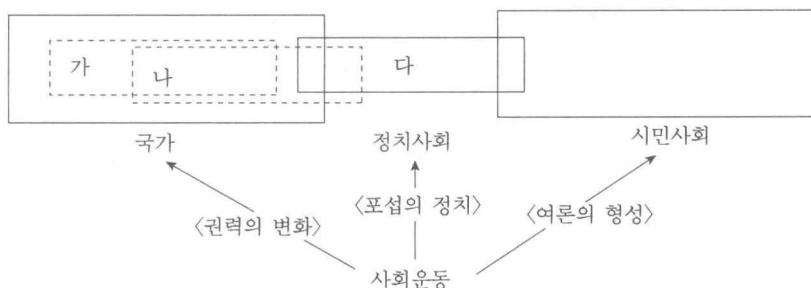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거친 한국은 김영삼 정권의 변형주의적 '수직적 정권교체'와 김대중정권의 신변형주의적인 '수평적 정권교체'의 한계로 인해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지연되고 있다.¹²⁾ 최대주의적 민주주의의 이상을 제쳐놓고라도,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출발인 선거민주주의의 단계에 놓여 있을 뿐 그 귀결이라 할 자유민주주의의 단계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Schedler, 1998). 즉, 민주적 헌법에 의해 보통선거가 주기적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신진인사의 진입장벽이 높으며, 여야정당에 의한 공생적 엘리트 담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이 차단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도 지역감정과 색깔론에 의해 회유될 만큼 민주주의의 행위규범을 충분하게 내면화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논지에서 〈그림 1〉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¹³⁾ 국가는 정치권력이 자리잡고 있는 정점(頂點)이며, 시민사회는 사적(私的) 관계가 연합되고 분

11)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에 관해서는 구 사회운동과 신 사회운동이 수렴하기고 하고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점은 신 사회운동을 근대화에 대한 '근대적 비판'으로 보는 Offe(1990), Habermas(1981)와 같은 입장과 '탈근대적 극복'으로 보는 Touraine(1995), Melluci(1990)와 같은 관점의 차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필자의 논의는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자의적인 구분임을 밝힌다.

12)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은 3권분립이라는 '수평적 책임성' (horizontal accountability)과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수평적 책임성' (vertical accountability)이 결여된 '부분적 제도화' (partial institutionalization) 혹은 '지연된 민주화' (delayed democratization)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Donnell, 1996).

13) 정치사회에 관해서는 Stepan(1988: chap. 1), 최장집(1993: 381-383), 임현진(1993: 170-171), 윤상철(1998: 4-6), 손호철(1999: 263-265), 김수진(1999: 242-243)을 참고하라.



〈그림 1〉 국가,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의 현주소

리되는 공간이며, 정치사회는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경쟁이 벌어지는 정당정치
의 영역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것이 바로 정치사회이다. 정치사회가 독
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역량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지난날 권위주의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듯이 국가에 복속된 정치사회가 1987년 6
월 민주항쟁 이후 그로부터 이탈하여 왔지만('가'에서 '나'로의 위치 변화), 정치사
회는 여전히 시민사회 보다 국가 쪽에 편입되어 있는 형편이다(정상적 위치는 '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은 첫째, 시민사회에서 공공영역의 확장이라는 '여론의 형성',
둘째 정치사회에서 정당과 의회의 개혁이라는 '영향의 정치', 그리고 셋째, 국가의
영역에서 수평적, 수직적 책임성의 강화라는 '권력의 변화'라는 여러 가지 시도를
동시에 힘겹게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한국의 사회운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볼 때
'항의와 도전' 보다는 '갈등과 협력'의 면모를 짙게 나타내고 있다(Giugni and Passy,
1999 참조). 이것은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이라는 군부권력과 김영삼 정권과 김
대중 정권이라는 민간권력 사이의 권력성격, 사회연합, 계층기반 측면에서의 명백
한 차이를 가르쳐준다. 사회운동은 자기유지적인 반복가능한 제도화 과정에서 흡
수(cooptation), 포섭(inclusion), 그리고 일상화(routinization)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Meyer and Tarrow, 1998: 21). 민간권력의 태동 이후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활동가들
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 혹은 대표자로서 비상임 내
지 상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야정당의 입문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진출하거나 또한 행정부의 장·차관 내지 고급관료로 선임되는 흡수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포섭의 수준에서 보면 제도정치의 사회운동에 대한 관용의 범위와
폭이 넓어지고 있다. 과거 상상할 수도 없는 청원과 소청 등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집회, 시위와 아울러 토론회, 공청회가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단체들에 대한 공적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중앙과 지방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지만, 한국사회의 구조개혁과 민생문제에 대한 주요 쟁점들이 제도정치의 차원에서 논의됨으로써 의제화와 법제화라는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운동집단들이 국가의 자문과 협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운동집단들과 정부기관 사이에 개인적, 운동적, 사회적 차원에서 항의와 협력이 교차하는 갈등적 협력관계를 엿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는 셀로몬이 지적하는 ‘결사체적 혁명’이 휩쓸고 있다. 비록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도약은 지체되고 있지만, 사회운동집단들은 ‘압축발전’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내걸은 가치, 규범, 정책, 제도 등에서 정부와 공중 모두로부터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 보여온 시민 참여의 유도는, 갠슨(Gamson, 1975)의 표현에 의하면 사회운동의 ‘전면적 반응’(full response)을 가져왔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인권증진, 부패척결, 복지확대, 환경보호, 의정평가, 조세개혁, 정의실현 등에서 사회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을 부인키 어렵다.

3) 정치적 기회구조, 운동조직의 능력, 대중적 지지기반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란 운동가들의, 개인적 혹은 집합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치과정의 직, 간접 참여를 말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당의 결성이나 활동가의 기존 정치권 진출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향한 로비활동이나 압력단체로서 영향력 행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사회운동이 국민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권력엘리트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Tilly, 1994: 7). 사회운동이 공공정책에 제재를 가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권력획득의 주체가 되는 이유도 그러한 이익집단 이상의 정치지향성에 놓여 있다. 이점에서 사회운동은 공공선이란 명분아래 사회의 창조적 변형을 위해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의식’, 상대방을 규정하는 ‘적대의식’, 그리고 기존의 것에 대안적인 사회의 일반원리를 제시하는 ‘전체의식’을 통해 체제변형을 시도하는 경향을 지닌다(Touraine, 1985: 761).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역사는 해방정국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¹⁴⁾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대체로 민주화 이후라 볼 수 있다. 1987

년 6월 시민항쟁을 계기로 사회운동의 활동 공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운동집단들의 정치권 로비와 압력단체의 역할에 더 나아가 일부 활동가의 정치권 진출과 사회운동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당 결성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비관이 부정으로 인식되고 저항이 반역으로 간주되던 군부정치가 민간권력에 의해 밀려나면서 참여가 비판을 대신하고 협력이 저항과 병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운동의 실상이다. 실제로 김영삼 정권이후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숫자의 사회운동권 인사들이 국회와 아울러 기초·광역 단체장 및 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를 목도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진보정당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자정당 창당은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가 다수 활동가들이 기존 여야정당으로 '수혈' 되는 제도정치강화용으로 역이용된 바 없지 않다.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열거할 수 있다. 필자는 유럽과 미국 사회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적 현실에서 다음 〈그림 2〉 같이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및 사회적 대중 기반을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고자 한다.¹⁶⁾ 여기서 정치적 기회구조는 체제성격, 정치연합, 정당구조, 선거제도,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은 전략목표, 동원맥락, 인지과정, 하부구조, 그리고 사회적 대중기반은 사회성격, 균열구조, 동맹관계, 정치문화 등으로 세분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거래를 통한 변형주의적 민주화 이행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14) 이 시기의 사회운동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좌우세력의 정당결성과 관련하여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그것이 위로부터의 동원이란 한계도 있지만 밑으로부터의 분출이란 특성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15) 종합적 사회운동집단체 대표적인 보기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96년 총선에서 24명의 출마자중 3명의 당선자를 내었고, '환경운동연합'은 1명의 출마자가 당선되었고, 그리고 참여연대는 2명의 출마자가 모두 낙선되었다(지방의회의 경우는 참여연대를 빼고 많은 숫자의 실무자와 회원들이 출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단체 소속의 상당수 활동가들이 현재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16) 여기에 관해서는 McAdam, McCarthy, and Zald, 1996, McAdam 1996, Clemens, 1997, 조대엽, 1999, 임현진·공석기, 1997을 참고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의도적으로 국제적 맥락을 배제하고 있다. 물론 세계사회론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국제사회의 규범과 NGO 사이의 연대가 국민국가 안에 테두리진 사회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로 이어지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평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림 2〉 정치세력화의 조건

체제의 청산이 뒤로 밀어지는 ‘지연된 공고화’ (delayed consolidation)를 겪고 있다(임현진, 1998: 416; Mainwaring, 1992: 323; 윤상철, 1998 참조). 그러기에 정치체제는 개방되어 있지만 구체제의 인사들이 국가기구 안에 광범하게 포진되어 있으며, 정당정치는 이념이나 색깔보다 종전과 같은 지역구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시민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질적 사회단체들에 의해 상충하는 격전장으로서 분열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점에서 오늘의 한국은 ‘혼합체제’ (mixed regime)에 가깝다 (Schmitter, 1997: 243-245). 즉, 권력본체로서 국가의 이중적 성격이 사회운동의 ‘압력정제’와 정당정치의 ‘선거정제’와 정치사회의 ‘대의정치’와 비정상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민간권력의 출범에 따른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장은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못된다. 정치체제의 개방은 기성 정권엘리트들의 연고와 고객 관계의 범위 안에서 인사충원과 권력분배를 한정시킴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등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이 정당성 확보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영입과 충원은 오히려 사회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기성권력의 전술적 고려의 일환일 수도 있다. 대권장악을 위해 가능했던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 사이의 이종합종(異種合從)적인 지역연합은 인사개혁이나 체제혁파를 지체시키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에 바탕한 다당적 정당구조아래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은 의회활동을 위한 정치사회로의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상 현재의 정당구조와 선거제도는 ‘외생정당’의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는 사

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다. 일인보스아래 당내민주주의가 가동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인일표의 소선거제와 비례대표제가 맞물려 있는 선거제도는 신진세력의 원내진입 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치자금, 선거제도, 투표방식의 개선이 화급한 실정이다.

사회운동집단들의 조직과 재정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종합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사회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유도 풀뿌리 수준의 하부구조가 부실하다 보니 '이것저것' 온갖 역할을 포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전략목표는 광범위할 수밖에 없고 운동성원들이 전문성과는 다른 것에서 조직의 정체성을 인지하게 만드는 경향을 낳는다. 사회명사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서 파생되는 관료주의와 편의주의 또한 대중과는 괴리된 엘리트 지향적 사회운동으로 잘못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우리 사회운동집단들의 자발성, 전문성, 독립성의 견지에서 볼 때 아직은 때가 이르다 하겠다.

결국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우리 시민사회의 질에 달려 있다. 사회운동의 묘상으로서 시민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가 호혜-수원관계에 의해 사적 신뢰가 공적 신뢰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의 시민사회는 현실정치에 대해 겉으로 부정하면서도 안으로 긍정하는 모순적 정치문화의 장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시민의 공공의식이 내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난 '무정형의 시민사회'는 시민과 민중의 이해가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지역적, 세대적, 계급적으로 균열되어 있다. 이러한 균열이 다양한 동맹과 갈등 관계아래 여러 차원에서 헤게모니 투쟁을 가져오고 있는 어지러운 형국이다. 여기서 정치세력화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시민사회 안에서 사회권력의 잉태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정치에서 아무런 실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4. 진보정당 경험 검토

1) 한겨레민주당

가. 사회·정치 지형

한겨레 민주당이 창당 될 당시의 사회정치적 조건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이행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1987년 직선제 쟁취 이후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라는 열린 공간에서 한겨레 민주당은 80년대의 민주화라는 자양분을 기초로 창당과 적극적인 정치적 진출을 모색했다.

1982년 이후 전체 경제상황이 개선과 특히, 86년부터 경상수지의 흑자라는 경제적 조건의 향상은 당시 정권이 이른바 유화국면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 자신감의 토대가 되었다. 실업률도 84년도부터 안정되었으며, 전 산업 월평균 임금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반면 노사분규는 84년도부터 시작된 유화국면과 맞물려서 85년부터 두드러지게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87년 6월 항쟁 이후 전개된 노동자 대투쟁 및 그 이후의 88년과 89년도에는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같은 시기 민중운동·사회운동은 83년 9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의 출범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다.¹⁷⁾ 특히 민청련 내부에서 진행된 노선 논쟁 즉 이른바 ‘CNP’ 논쟁은 이후 한국사회의 성격 및 운동 전략·전술에 대한 논쟁의 출발이 되었다. 또한 85년 3월에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으로 기존의 여러 조직들이 확대-통합되었으며, 민청련 역시 2차 통합대회에 참여하였다. 한편, 김영삼과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은 84년 5월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결성한 후, 85년 1월 신민당을 창당시켰으며, 85년 12대 총선에서 단번에 제1야당의 위치를 확보했다.

민통련과 신민당은 ‘직선제 개헌론’을 주장하며 개헌투쟁을 전개했고, 여기에 정권의 4·13호헌 조치 및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사건 등이 맞물려 87년 6월 항쟁이 발발하였다. 한때 지배권력을 위협하던 정세는 이른바 6·29 선언을 통한 직선

17) 80년대 초중반의 반정권 민중운동 조직상황은 조현연(1997: 78) 참고.

제 개헌 합의 이후 선거 국면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의 위상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결국 내부 분열로 귀결되고 말았다. 결국 야당과 민중운동의 분열에 이어서 민중운동 진영마저도 여러 입장으로 갈라지면서, 이후의 정국은 정권(정부)과 여당에서 주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겨레 민주당〉은 87년 대통령 선거의 패배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도권 진입을 위해 재야의 일부 세력이 주축이 되어 창당되었고,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추진세력 및 목표

한겨레 민주당의 주요 구성 주체들은 인권·민주화 투쟁을 해오던 명망성 있는 재야인사들 내지는 70-80년대 학생운동·사회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지식인들이었다. 박진서(1991: 32-34)는 88년 총선에 참여한 평민당 입당파(평민련)와 한겨레 민주당 입후보자를 비교하면서, 최소한 평민련보다도 한겨레 민주당 입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재력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의 특징은 민중의 당과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해진다. 당시 민중의당은 비합법 노동운동에서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노련)과 제헌의회그룹(CA)의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이 두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한겨레민주당은 '양심적인 각계각층의 국민'이라는 말로 대중성을 강조한데 반해서, 민중의당은 노동자, 농어민 그리고 도시빈민 등 민중에 기반하는 계급성을 강조했다(박상병, 1997: 82). 따라서 한겨레민주당은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¹⁸⁾ 평민당·민주당을 포괄하는 범야권통합정당을 목표로 했다.

다. 정강과 정책

한겨레민주당은 강령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자율성 회복,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통일, 항일과 반독재 전통의 계승 등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겨레민주당이 제시한 강령의

18) "오늘 우리는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한 채 암투와 공작 정치, 파벌에 얽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정치 현실을 타개하고, 진정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민과 하나되어 함께 전진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정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겨레 민주당의 출범을 사천만 국민앞에 선언한다" (한겨레민주당, 1988: 34).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제반 독재악법을 철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보장한다.
3.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조속히 개선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한다.
4. 민족자립경제를 건설하고 경제적 민주화를 이룩한다.
5. 분배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6. 주택, 의료, 보건, 사회보장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생활조건을 대폭 개선한다.
7. 민족정기 함양을 위한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제도의 민주화를 이룩한다.
8.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문화활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한다.
9. 평화와 호혜평등의 대외정책을 시행하고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한다.
10. 남녀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신장한다.

한겨레 민주당은 이러한 강령에 기초해서 기본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정책은 다시 정치·외교, 평화통일, 경제·사회, 교육·문화, 여성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라. 경과

87년 12월 '새로운 정치운동을 위한 준비모임', '한겨레연구소', '새정치동지회' 등은 (1) 신진정치세력의 결집 (2) 독자적 정치노선의 구축 (3) 합법적 대중정치조직의 건설 (4) 제민주세력과의 연대 등 4개의 기본원칙에 동의 '새정치추진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은 뒤에 다시 '신당추진지역협의회' 등이 참여하면서 '범민주통합신당추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88년 1월부터 '민중정당결성추진위원회' '신당추진지역협의회' '새정치준비모임'은 '3단체간의 통합신당을 위한 연석회의'를 벌였지만, 연석회의는 끝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이념적 민중성과 급진성이 약했던 새정치준비모임과 신당추진지역협의회 일부가 모체가 되어 탄생한 것이 바로 <한겨레 민주당>이다.¹⁹⁾

19) 한겨레민주당 스스로는 자신들이 표방한 정치의 첫 출발을 이른바 '용문모임'에서 찾고 있다(한겨레민주당, 1988: 2). 즉 1987년 8월 29-30일 경기도 용문산 천주교 청소년 캠프장에서 87년 "6, 7, 8월의 전 국민적인 민주항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문과 지역사회 각계 각층을 망라한 신진

〈표 2〉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

() 안은 지역구 의석수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공화당	한겨레민주당	민중의 당
득표율(%)	33.96	23.83	19.26	15.59	1.28	0.33
의석수	125(87)	59(46)	70(54)	35(27)	1(1)	0

자료: 박상병(1997: 83)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 당은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이라는 커다란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창당의 길을 걸었다.

한겨레 민주당은 선거를 두 달 여 앞둔 1988년 2월 17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가진 후 민족민중운동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했지만 실패하고, 이후 3월 말에 독자적으로 창당하였다. 한겨레민주당은 중앙당 창당 약 10일 만인 4월 8일 선거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급속하게 선거국면으로 전환한 것은 한겨레민주당의 오랜 준비나 또는 주체적 능력이 아니라, 선거일정의 급박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3대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민중의 당과 달리 한겨레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 한 개를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당선된 한겨레민주당 후보(박형오)는 당선 후 평민당에 입당하는 조건으로 한겨레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했으며 실제로 당선 후 평민당에 입당하였다. 지지율에서는 한겨레민주당이 민중의 당에 비해 4배 정도의 수치를 보이지만, 전체 입후보자의 수가 한겨레민주당의 경우 63명이었던 반면에 민중의 당에서는 단지 16명이 입후보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지지율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

당시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 당의 입후보자 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두 당의 주체적 역량의 문제 못지 않게 선거국면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및 주요하게 생각한 선거활동의 내용 차이에도 그 이유가 있다(박진서, 1991: 28-32). 민중의 독자성보다는 대중성을 강조하며,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보다는 야권통합 및

정치세력을 결집, 새로운 정치운동으로서의 '민주적 대중정당'의 결성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는 것이다.

민주대연합을 중시했던 한겨레당으로서는 가능한 많은 후보를 내세우는 전술을 채택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 모두 결과적으로 본다면 선거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정당 모두 자신들의 전략·목표·전술을 펼치는데 있어서 선거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지자 대변의 논리'를 분명히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민중의 당과 비교해도, 한겨레민주당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도권 야당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적이고 분명한 이념이나 지향을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야당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연대'를 강조한 나머지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총선 이후 한겨레민주당은 형식적으로는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1991년 3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정지구당수 미달의 이유로 등록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서류상의 정당 등록도 잃게 된다(한겨레신문, 1991). 총선 이후 두 진보정당 운동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모두 1차적으로 진보정당 또는 진보정치를 표방했던 세력들의 통합 실패 및 분열이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동시에 진보정당 운동이 비록 13대 총선에서 실패하기는 했지만, 87년 6월 항쟁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정치지형에서는 진보정당 운동이 하나의 시대적 요청이라는 신념을 유지했다.

마. 의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겨레민주당은 민중의 당과 함께 80년대 이후 최초로 본격적으로 시도된 진보정당 운동이었다. 기존의 정치구도가 87년 항쟁 및 이후의 대선을 통해서 변형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출발한 진보정당 운동은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단 13대 총선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진보정당 운동 주체들의 분열 및 야당과의 적절한 관계 수립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실패한 실험이자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는 결코 13대 총선의 결과로 한정되어서 이야기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민중운동의 상당수 지도부 및 세력들이 여전히 제도권 야당과의 연합에 치중해서 민중들의 독자적 정치 진출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하지 못한 가운데, 진보정치를 지향하고 보수야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민중을 정치의 독자적인 주체로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큰 의의를 갖

는다. 다만, 이 점에서 한겨레민주당의 경우 여전히 민중의 독자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보다는 야권과의 연합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들의 운동이 비록 13대 총선에서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후 펼쳐질 진보정당 및 진보정치 운동의 출발이 되었다는 점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총선 이후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 당은 진보정당 세력의 통합을 모색하였다.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정당재건축추진위원회는 88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단일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공청회' (한겨레민주당·민중정당재건축추진위원회, 1988)를 가졌으며, 공청회를 통해서 비록 13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변혁의 시각에서,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당을 결성해야"하며, 진보정당이 가능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주체역량 역시 광범위하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진보정당 사업을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다.²⁰⁾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정당재건축추진위원회는 9월 14일 그 동안의 통합실무 과정과 공청회를 통해 접근되었던 내용을 기초로 양당의 통합을 결의하고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진보련)을 결성하였다(박상병, 1997: 90). 이는 진보정당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이를 이유로 각기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갖고 총선에 임했던 진보정당 세력들이 드디어 통합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2) 민중당

가. 사회·정치 지형

민정당은 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있었던 총선에서는 단지 125석만을 획득함으로써 평

20) 당시 공청회에서 이들은 진보정당의 성격 및 위상과 관련해서는 "진보정당은 우리 민중의 요구와 사회발전의 방향에 명확히 서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며, 사회를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혁시키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 1) 민중을 억압하는 외세와 파시즘, 독점 자본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2) 민중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이어야 한다 3) 국가권력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4) 진보정당의 계급적 기반은 민중을 억압하여 기득권을 누리는 독점자본, 외세, 파시즘, 반동 관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둔다"고 밝히고 있다 (정태윤, 1988: 4-6).

민당과 민주당의 합계 의석수 129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황금분할'이라고도 불렀던 야당 주도의 정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1990년 1월 22일 민정당,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3당 통합'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일으키면서 '민주자유당' (민자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3당 합당의 본질은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안정적인 재창출" (박상병, 1997: 101)이라고 할 수 있다.

3당 합당으로 이제 재야와 민중·사회운동 진영의 선택은 김대중의 평민당과의 연합이나 독자적인 진보정당 건설로 좁혀졌다. 87~88년 나름대로 진보운동에 유리했던 상황은 89년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해가면서 민중·사회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물리적 탄압을 개시했으며, 민자당 창당으로 불안정한 소수 여당이 거대 여당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분명해졌다. 하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 다시금 정치·사회운동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각 계급계층의 운동은 쉽게 사그라 들지 않았다. 오히려 각 계급·계층·부문별로 조직을 만들어 나갔는데, 90년 전노협(노동자), 전교조(교사)의 형성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한편 민중운동·사회운동 진영에서는 13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민통련'이라는 대표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었기 때문이며, 그 뒤를 이어서 1989년 1월 2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민련)이라는 상설 공동 투쟁체가 만들어졌다. 전민련은 민중운동단체의 연합 조직으로서는 당시까지 최대의 조직이었으며, 여기에는 8개 부문 단체와 12개 지역 단체가 참가했다. 이로써 민중운동·사회운동 진영은 다시금 단일 조직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90년 1월 3당 합당 이후에는 민자당에 반대하는 민중운동 및 재야·사회 단체들의 한시적 공동 투쟁체로서 '국민연합'이 출범하였다. 이 국민연합에는 전민련 외에도 전노협, 전교조, 전농, 전대협 등 전국적 규모의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즉, 운동 주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 비조직화되고 분산되어 있던 운동세력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형태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나. 추진세력 및 주체

민중당의 창당 및 활동에는 13대 총선에서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 당을 통해서 참여했던 진보정당 운동 세력, 전민련 내에서 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세력, 이미 민중의 당을 통해서 진보정당 운동에 참여한 바 있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합(인노련), 사노맹 계열의 일부 세력, 학생운동 내 PD파와 CA 계열, 노동운

동 내 좌파진영(이른바 3자 연합)이 주체가 되었다. 여기에 일부 진보적 지식인 및 지역·사회 운동가들이 결합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3대 총선 후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당으로 각기 총선에 임했던 진보정당운동 세력이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진보련)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정태윤, 제정구, 유인태, 김부겸, 이강철 등이 참여하였다. 한편, 89년에는 영등포 을구 재선거에 대한 전민련의 선거 참여 평가 과정에서 합법정당 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박계동 등이 전민련을 탈퇴하여 '새정당 창당을 위한 임시연락사무소'를 결성했다. 이후 진보련과 전민련 1차 탈퇴자들은 89년 11월 10일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발족시켰다. 진보정당 준비모임에서는 전민련 1차 탈퇴자들이 핵심 간부직을 맡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이후 민중당 창당 과정과 창당 후 지도부 구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90년 1월 민자당이 창당된 이후 전민련 내에서 다시금 진보정당 건설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지고 그 결과는 이부영, 이재오, 여익구 등의 전민련 2차 탈퇴 및 백기완, 박형규, 계훈제, 이소선 고문의 사퇴로 이어졌다. 진보정당 준비모임, 전민련 2차 탈퇴자, 한겨레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중심이 되어 4월에는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가 출범했다. 하지만 야권통합을 둘러싸고 진행된 내부 논란 끝에 이부영 등의 전민련 2차 탈퇴자와 제정구 등의 한겨레민주당 출신 세력은 민연추를 탈퇴하고 범민주수권정당 결성을 위한 통합추진회의(통추회의)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결과 민중당의 창당에는 일단 전민련 1차 탈퇴자들이 중심이 된 진보정당준비모임 세력이 핵심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당 대표에는 이우재, 사무총장에 이재오, 정책위원장에 장기표, 기획조정실장에 정태윤, 대변인에 정문화 등이 선출되었다. 하지만 각 지구당 및 실무자들의 상당수는 인노련을 비롯한 비합·반합 노동운동·정치조직 출신들이 장악하였다. 이후 민중민주파 계열의 비합법 노동운동 조직체였던 인노련은 "노동계급", "삼민동맹"과 함께 3파 연합을 형성하고 '한국노동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여러 과정을 거친 후 민중당과 통합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으로만 민중당 활동에 참여하였던 일부 노동운동 세력들이 직접적으로 민중당의 활동 주체의 일부가 되었다.

다. 정강과 정책

민중당의 기본 성격 및 지향은 그 창당 선언문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민중당은

그 기본목표를 “외세와 군사독재의 통치를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민주 정부를 수립함에 있으며 민주 주도의 자립 경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달성”으로 규정하였다(민중당, 1990b: 6-7). 민중당은 기존의 보수야당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데올로기적 진보성을 선언함으로써 민중당이 갖는 정당의 위상을 분명히 했다(박상병, 1997: 118). 민중당의 강령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민중당, 1990c).

〈표 3〉 민중당의 강령

항 목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기본 이념과 지향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 수립	교육	인간해방을 위한 교육
외교	자주 · 평화 · 호혜평등의 국제사회	정치	진정한 민주주의
경제	민주 주도의 개방적 · 자립적 경제 구조	남북관계	평화통일
농업	농업 · 농민문제의 올바른 해결	노동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세계의 질적 발전
복지	사회복지 실현	여성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연대
		문화	민중문화 창조
		환경	자연과 인간의 공생으로서의 환경 보전

민중당은 당명 및 강령을 통해서 기본 보수정당과는 구별되는 진보정당이면서도 결코 단일한 계급정당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조금은 모호한 ‘민중주체 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민중당의 이념은 사회주의에 가깝기는 했지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 점에서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된다.²¹⁾ 민중당의 강령은 다시 정치 · 행정, 통일 · 외교, 경제, 노동, 농업, 사회복지, 주택 · 토지, 여성, 교육, 문화, 언론, 교통, 환경, 과학기술의 14가지 기본정책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민중당, 1990c: 22-49).

21) 이에 대해 장기표 정책위원장은 “이를 민중주체 민주주의라고 하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모순이 첨예한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실천과정을 통해 완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한겨레신문, 1990-11-11).

라. 경과

민중당은 진보련 결성, 전민련 간부 1차 탈퇴 및 새정당 임시사무소 설치, 진보련과 새정당 임시 사무소의 통합을 통한 진보정당 준비모임 결성, 전민련 간부 2차 탈퇴, 민연추의 결성과 해체의 과정을 통해서 창당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중의 당 출신 인사, 노동현장 등에서 비합법·반합법 활동을 전개하던 활동가들은 지구당 위원장 및 하위 당직을 맡는데 그쳤다. 이들은 오세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교수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소속 일부 학생들과 함께 좌파 블록을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당 지도부의 우경적 노선에 반대했다. 하지만, 91년 7월 15일 '실무자회의 사건'을 통해서 좌파 블록 중 상당수가 민중당에서 제명됨으로써, 민중당은 당내 좌파와 우파의 건전한 견제 및 긴장 관계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

민중당은 창당 이후 지속적으로 여러 사회·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한편으로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91년 5월 정국에 만들어졌던 '범국민대책회의' 참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91에는 광역의회 선거에도 참여해서 총 45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선거 결과 민중당에서는 강원도 정선에 출마한 성희직 후보만이 당선되었다. 당시 지도부는 이 선거결과에 대해서 "민중당 45명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 16%의 득표율을 보여 진보정당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중앙일보, 1991-6-22)였다고 평가했다.

지자체 선거 이후 민중당은 9월 '전 민족민주운동 진영에 드리는 민중당의 긴급 제안서'란 형태로 <새로운 민중정당의 건설로 나아가자>는 문헌을 통해 자신의 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재야세력의 진보정당운동 참여를 촉구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민중당, 1991: 1-11). 반면에, 기존에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을 주장하던 비합법 노동운동 조직체들은 합법적 노동자 정당 건설로 그 방침을 전면 전환하고 한국 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합법적 진보정당 운동 전면에 등장하였다. 한국 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와 민중당은 92년 2월에 통합에 합의하였다.

민중당 지도부는 수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였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통합은 커녕 선거연합도 무산되었다. 14대 총선에서 민중당은 당초 100명 정도의 후보자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민중당에서는 52명의 후보만이 출마하였다. 입후보자들은 대체로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지역과 영남 지역에 집중되었다. 선거 결과 민중당은 단 1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효 득표율도 1.5%밖에 기록하지 못함으로써 정당 존속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당초 최소한 1명 이상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선거 이후에는 당을 해산하고 다른 재야운동 단체와 연대해 새롭게 진보정치 운동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중앙위원회에서 한노당 출신의 지구당 위원장들은 당의 해체가 아니라 민중당 조직을 보존 및 강화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을 재창당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중앙위원회에서 소수였던 지도부 중심의 세력은 이후 민중당을 떠나서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민사협)을 결성했으며, 이들 중 몇몇은 15대 총선에서 여당으로 출마해 국회의원 진출에 성공하기도 했다. 한편 한노당 창준위 측 활동가들은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를 결성하였다. 이로써 민중당은 민사협 및 진정추로 완전히 분리되었고, 형식적으로는 진정추가 민중당을 계승하는 조직이 되었다.

마. 의의

민중당의 활동이 갖는 의의 또는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첫째, 그동안 지역주의 균열에 기초해서 보수주의적 정당만이 존재했던 한국 현실에서, 정치적 이념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를 추구했다. 비록 총선이라는 현실 정치에서는 실패했지만, 한국 정치에서 '계급균열로서의 사회균열을 정치균열로 전화'하고자 했으며(박상병, 1997: 287), 그동안 정치의 객체에 불과했던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전면에 내세웠다. 둘째, 단지 선거용 1회 정당이 아니라 생활로서의 정치 또는 일상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비합법 또는 반합법 노동·정치 운동 세력들 중 상당수가 진보정당에 참여함으로써 진보정당 세력이 넓어지도록 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했다. 특히 민중당 지도부의 당 해체 선언 이후에도 진보정당 운동의 흐름을 유지했던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분명하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 첫째, 지역주의 사회·정치 균열을 계급 균열에 기초한 사회·정치균열로 바꾸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계급적 기반을 갖지 못했다. 특히, 87년 이후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힘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둘째, 진보정당 운동에 동의 또는 공감하는 세력들 전부를 포괄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과거 전민련 간부와 같은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당내 좌파와 우파가 건강하게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셋째, 총선 이후

당 지도부가 보여준 청산주의적·패배주의적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들은 결국 진보정당 운동을 국회의원직 진출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이후 이들의 정치적 행태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3) 통합민주당(개혁민주당)

가. 사회·정치 지형

통합민주당은 95년 12월 4일 창당되었다. 창당 당시만 하더라도 당의 공식적인 명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통합 민주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개혁시민연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시민연합의 발기모임이 만들어진 후 최종적으로는 통합민주당으로 여러 세력이 통합해서 15대 선거를 치루기까지의 시기는 바로 95년 7월부터 96년 4월에 해당한다.

이 당시의 가장 큰 정치적 특성은 최초의 민선기간정권인 이른바 ‘문민정부’로 나타낼 수 있다. 문민정부는 3당 통합으로 상징되는 보수집권세력의 후계자라는 점과 여하튼 민주화운동 세력의 연속선상에 놓인다는 매우 모순적인 성격을 갖고 출발하였다. 이런 점에서 당시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 “군부권위주의 체제를 승계하면서 동시에 그 해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행국면에서의 후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다만, 후기 단계는 초기 단계보다 민주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민주적 공고화의 과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다(박상병·조현연·조희연, 2001: 324).

문민정부는 시기별로 매우 상이한 성격을 가졌다. 박상병 등은 아래의 표에서처럼

〈표 4〉 문민정부의 시기별 성격

시기 구분	기간	시기 성격	주요 내용
제1기	93년 2월-93년 말	개혁기	사정, 안기부 및 군 개혁, 금융실명제
제2기	94년-95년 6월	개혁 실종, 수구화기	지자체 선거 패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경쟁력 우선주의, 세계화 추진
제3기	95년 6월-96년 4월	재개혁기	전·노 구속, 역사 바로세우기
제4기	96년 5월-97년 말	개혁 붕괴, 재수구화기	한총련 사태, 노동법·안기부법 파동, 한보·김현철 비리, IMF 위기

자료: 박상병·조현연·조희연(2001: 329)

럼, 이 문민정부 시기를 개혁기-수구화기-재개혁기-재수구화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기는 거의 정확하게 재개혁기에 해당한다.

95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집권당은 참패하였으며, 이는 3당 합당구도의 파괴 및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기반 축소를 뜻했다. 게다가 김대중마저 정계에 복귀한 상황에서 김영삼 정권은 정국의 전환 및 김대중의 대중적 기반 약화를 위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목적의 개혁정책을 다시 추진한 것이다.

이처럼 통합민주당의 출현은 그것이 민주화 이후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 진보정당의 등장과는 정치지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 중반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라는 변화된 여건에서 사회운동권의 일부는 김영삼 정권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민중당의 실패라는 경험 속에서 사회운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덕택으로 민주가 반민주를 제압한 상황에서 사회운동권은 김영삼 정권의 개혁성이 퇴조하는 가운데 김대중의 정계 복귀 선언으로 인하여 다시금 불거진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오너정치'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기에 이르렀다(임현진, 2000: 13-14).

나. 추진세력 및 주체

통합민주당의 창당 과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었다. 먼저 정치개혁시민연합(정개연)이 95년 7월에 발기 모임을 가졌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95년 11월에는 개혁신당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개혁신당과 기존의 민주당이 당대당 통합 형식으로 새롭게 통합민주당을 창당했다. 따라서 통합민주당의 주체 역시 시기별로 구분된다.

첫 단계인 정치개혁시민연합의 결성에는 사회운동단체(정성현, 최열, 박인제 등), 구민중당 출신(장기표), 구한겨레민주당출신(이현배), YS·DJ 비판 그룹(홍성우), 언론계(임재경·성유보), 학계(김대환, 임현진, 장을병), 기업계(오호근) 등이 주도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개혁신당의 출범에는 앞의 인사중 일부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운동단체 특히 경제정의 실천연합 활동가들(서경석, 장신규, 송운학)과 20·30대 모임인 '젊은 연대'(고진화, 이성현 등) 등이 가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당대당 통합에서는 민주당의 '개혁파'(이부영, 노무현, 김정길, 제정구, 이철, 유인태, 박계동, 원혜영 등)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임현진, 2000: 14).

이들 주체의 면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통합민주당에 참여한 인사들 중 상당

수는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독자적인 진보정당보다는 야당과의 연합을 우선시한 정당운동을 강조한 이들 및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사회운동 세력 그리고 기존 보수야당 내에서 나름대로 개혁성을 표방했던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정강과 정책

정치개혁시민연합(정치개혁시민연합, 1995a)은 '창립선언문'에서 '열린사회, 바른 정치'를 자신들의 이념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1) 시민 주체의 생활 정치와 도덕 정치의 실현 (2) 국민 통합과 민족 통일의 준비 (3) 녹색 환경의 보존과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였다.

한편 개혁신당은 95년 11월 27일의 당헌 전문에서 "군사독재와 부패정치, 봉당 정치와 지역 맹주정치의 낡은 틀을 혁파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민주정치, 깨끗하고 양심적인 도덕정치,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개혁정치를 실현하여 21세기의 자랑스러운 통일조국과 선진적인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이를 앞장서 이끌어 갈 국민정당으로 개혁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히고 있다(개혁신당, 1995a: 6).

개혁신당이 스스로 당헌의 주요 골자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원의 권한 강화와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원 직선제 도입 △대의기관의 당 권력 통제 권한의 보장 △당 심판 기능의 강화와 독립성 보장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의 독립 설치 및 역할 강화 △당내 선거에 있어 공정성 보장 △각급 당부의 정책 기능 강화(개혁신당, 1995b: 2).

또한 개혁신당은 총 7가지의 강령, 10대 정책 기조, 5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0대 정책과제는 사실상 10대 강령의 내용을 다시 세분화한 것이다. 50대 정책과제에서 제시된 10대 강령의 내용은 (1) 깨끗하고 생산적인 국민통합의 정치 (2)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의 건설 (3)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회 (4) 교육제도의 혁신과 문화부국의 실현 (5) 자율적, 생산적 노사관계 (6)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의 확대 (7) 획기적 환경개선과 녹색발전전략의 수립 (8) 과학기술선진국으로의 도약 (9) 자주적 국방과 실리적 다변화 외교 (10) 남북협력의 확대와 평화통일의 실현이었다. 개혁신당은 경제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의 건설이라고 명시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민주의적 성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혁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당헌 전문에서 “통일조국과 선진적인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주당과 개혁신당을 합당하여 이 땅의 진정한 국민통합정당으로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새로이 창당된 통합민주당은 우리 현대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정신과 맥박을 이어받은 정통야당이며,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정당임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통합민주당, 1995: 3). 이는 보수야당인 민주당과 새롭게 만들어졌던 개혁신당의 성격이 그대로 열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합민주당은 비록 당대당 통합 형식이기는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진 개혁신당이 사실상 민주당에 흡수당한 격이었다. 그러기에 통합 이후에도 통합민주당은 기존 보수야당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혁성 또는 진보성을 보인데 많은 한계를 가졌다. 그 결과 당초 개혁신당이 제시한 부동산 실명제, 돈세탁방지법, 재벌 소유경영 분리, 행정실명제, 복식부기제 도입, 시민소환제, 제정신청 허용, 인사청문회 도입, 상향식 공천제 등은 민주당과의 통합 이후 구체화되지 못했다(임현진, 2000: 14).

라. 경과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통합민주당의 창당 과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었다. 먼저 정치개혁시민연합(정개연)이 95년 7월에 발기 모임을 가졌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95년 11월에는 개혁신당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개혁신당과 기존의 민주당이 당대당 통합 형식으로 새롭게 95년 12월 통합민주당을 창당했다.

94년 7월부터 박형규와 홍성우를 비롯한 3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지속적인 개혁의 추진과 정치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95년 1월에는 새로운 범개혁 정치세력의 결집 필요성과 국민운동체 결성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토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 이들이 ‘(가칭) 정치개혁추진협의회’ 준비위원회 결성을 논의했다. 이러한 흐름은 마침내 1995년 7월 6일 ‘정치개혁시민연합’(정개련) 발기 모임으로 이어졌다. 이후 정개련은 젊은 연대 등과 함께 새로운 개혁신당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95년 11월 27일에 있었던 개혁신당 창당대회에서는 장을병·홍성우 창당준비위원장을 공동 대표로 선출했으며, 부대표에는 성유보 조직특위장, 장기표 통합특위장, 오현주 창당준비위부위원장, 곽영훈 환경개발연구원이사장을 선출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에 서경석, 정책위원장에 이삼열, 기획조정실장에 장두환, 대변인에 박

인제, 대외협력위원장에 서상섭, 홍보위원장에 김홍신, 청년위원장에 장신규, 대표 비서실장에 김성식을 각기 인선-확정했다.

통합민주당은 95년 12월 4일 통합수임기구 합동 회의에서 민주당의 김원기 고문과 개혁신당의 장을병 공동대표를 통합민주당의 공동 대표로 추대하였다. 또한 민주당 이기택 고문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고 공동대표와 똑같은 법적·정치적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선관위에 3인을 공동대표로 등록하기로 했다. 공동 대표외에도 6명의 최고위원 인선을 했는데, 이기택 고문 계열 2명, 통합모임 2명, 개혁신당 2명으로 배분되었다. 이상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통합민주당은 이기택의 정통보수야당, 민주당내 개혁세력, 개혁신당의 3세력으로 구성되었다(동아일보, 1995-12-5).

통합민주당은 96년 15대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11.2%의 지를 획득함으로써 지역구 9명, 전국구 6명 등 총 15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물론 개혁정당으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선거 이전 국회의원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패배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개혁신당 출신 당선자는 4명에 불과했으며, 민주당 개혁파는 거의 전멸했다. 그나마 개혁신당 당선자들도 지역구는 장을병 대표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김홍신·이미경·하경근 3명의 당선자는 전국구였다.

통합민주당 구성원들은 이후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다시금 김대중 지지(김정길, 노무현 등), 이회창 지지(홍성우, 이철 등), 기타 중립적 입장(성유보, 박인제 등)으로 갈라지면서 소멸하고 말았다.

마. 의의

통합민주당은 한겨레민주당이나 민중당과 같은 외생적 정당이 아니라 일정하게나마 내생적 정당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정치세력화에 있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또한 지향하는 이념이나 정책면에서도 기존의 진보정당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유연성 또는 온건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선거정치에서도 나름대로의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통합 민주당 역시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결국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과 사회적 대중 기반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좋은 여건에 있었던 개혁민주당의 좌절은 정치적 기회구조가 제 아무리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정당구조와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한, 체제개방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임현진, 2000: 15)는 점을 증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통합민주당은 그 구성 주체의 면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이었다. 기존에 여러 형태로 진보정당 운동에 관여했던 인사에서부터 기존의 보수야당 내에서 지도부를 구성했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띠었다. 따라서 기존의 정당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정책과 강령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존 정당의 지도부에 대해 비판적인 다양한 세력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다. 이러한 특징은 결국 통합민주당의 창당 이후에도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비효율성과 파당성의 원인이 되었을 뿐아니라, 선거를 통해 15명의 당선자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²²⁾

4)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앞서 살펴본 다른 정당들과 달리 현재도 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는 민주노동당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민승리 21의 활동에서 시작해서 지난 총선때까지의 활동에 국한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가. 사회·정치 지형

국민승리 21과 민주노동당의 활동은 대체로 2차 민선민간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권 또는 국민의 정부 시기에 이뤄졌다. 또한 이시기는 IMF와 같은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제와 사회 전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권의 성격은 이중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박상병·조현연·조희연, 2001: 342-345). 먼저, 지배의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권력의 재조직화라는 점에서 보면 민선군부정권이나 1차 민선민간정권을 뛰어넘는 혁신성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정상 국가화의 큰 흐름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

22) 이미 정개련 시절 내부적으로 정개련의 정치노선이 “정개련 구성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단순 3김 반대로만 인식됨으로써 현재의 민주당과 차별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민주당과 합당을 상정하더라도 결국 효과의 극대화라는 부문에서 낮은 수준의 결과(이는 궁극적으로 선거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음)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되었으며, 정개련 발기인들조차도 그 정치노선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정개련, 1995b: 2). 이러한 내부적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 채 또는 오히려 조직간 통합을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진 결과가 바로 총선 이후 사실상 통합민주당의 해체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은 기존의 지배질서와 갖는 갈등적 혁신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그치고, 기존 지배질서의 혁신적 재조직화의 측면을 강하게 갖는다는 평가이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IMF로 인해서 경제위기 현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98년 이후의 경기회복 역시 불균형성을 강하게 갖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재벌 중심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소득 분배 불평등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심화되었고, 고용사정의 악화와 임금격차의 증가라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상황 속에서 96-97년 사이에 전개되었던 노동조합의 정치파업은 현단계 노동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즉,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파행 통과에 맞서서 한국전쟁 이후 사상 최초의 총파업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를 다시 한번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경제·주체적 상황 속에서 다시금 진보정당 운동이 전면에 등장하였다.

나. 추진세력 및 주체

민주노동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승리 21의 결성에는 노동자와 빈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민주노총과 전국빈민연합, 민중당을 조직적으로 승계해서 민중당 해산 이후 지속적으로 진보정당 운동을 전개해온 진보정치연합, 민중당의 우경화를 비판하며 민중당 당내외에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던 정치연대, 과거 민중의 독자적 정당 건설보다는 야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던 입장을 변경해서 민주세력의 결집을 통한 국민후보라는 방침을 결정한 전국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비록 독자후보 전술 구상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공동의 실천을 내오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대선 후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대선활동에 대한 평가 및 국민승리 21의 이후 전망에 대해서 상이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연대와 전국연합이 탈퇴한 가운데, 현재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전국빈민연합, 진보정치연합 출신 활동가들, 전국연합 출신 일부 민족해방과 및 민중민주파 활동가들이 구성하고 있다(김정진, 1998: 119).

과거 민중당이 명망가 중심의 인사나 반합법·비합법 정치조직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에, 현재의 민주노동당에는 민주노총과 전빈련과 같은 기층 대중조직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구체적인 참여의 수준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층 대

중조직의 참여는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과거 민중당 활동 및 민중당 해산 이후 진보정당 운동을 전개해온 조직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보정당 운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전개하던 전국연합 출신 활동가들이 일부나마 민주노동당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역시 높이 살만하다.²³⁾

다. 정강과 정책

민주노동당은 강령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 …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 투쟁해 나간다 … 반민중적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 …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연대에 앞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고 밝히고 있다(민주노동당, 2000: 2-3). 이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정당들과 자신의 차별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기존의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 모두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을 제시하였다.

민주노동당이 표방하는 정치와 정당의 성격은 당헌 전문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23) 사실 전국연합은 독자후보 운동 또는 진보정당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크다. 대선 국면에서도 전국연합을 이루고 있는 서울연합 활동가들이 권영길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으며(박상병·조현연·조희연, 2001: 354), 대선 이후 전국연합 상임의장이던 이창복씨가 김대중 정권에 참여했으며, 전국연합 역시 현재로서는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본문에서의 평가와 달리 이해영과 오창엽 등은 현재의 민주노동당에서 과거 진정추 인사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장상환, 2000: 106-111).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들의 다양성 또는 다른 단체들의 대표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성격이 강하다.

〈표 5〉 민주노동당의 강령

항 목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기본 이념과 지향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정치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
경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통일	자주 평화 민족대화합의 통일
외교	자주 호혜 평등의 국제평화 체제	국방	합리적인 군축을 통한 21세기 통일 대비형 국방 건설
노동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	여성	여성이 해방된 진정한 인간 해방
농어민 · 도시빈민	농어업 보호정책으로의 전 환과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장	인권	억압과 차별의 타파와 민중의 인권 보장
사회복지	사회정의의 연대 평등에 입각한 복지 공동체 구현	보건의료	사회적 권리로서의 건강과 보건 의료
교육	교육의 공공성의 강화와 교육복지의 실현	문화	문화사회 건설은 사회발전 전략의 핵심
언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환경	친환경적인 대안 사회의 실현
과학기술	과학기술에서의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대안사회 건설		

자료: 민주노동당(2000: 3-33)

“민주노동당은 민주, 평등, 해방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의 정당이며, 여성,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진보적인 강령과 정책을 가진 이념정당이고, 노동자,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정당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민주노동당, 2000: 34)라는 글에서 민주노동당의 근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²⁴⁾

- 24) 물론,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서 강령 작성 단계에서부터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채만수(2000: 173-190)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강령의 전문과 형식의 장황함, 국가와 권력획득 방법의 불명료성, 계급성과 당파성에 대한 몰이해 및 정치, 경제 강령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논리, 사회주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몰이해, 경제위기 인식의 오류, 노자협조주의적인 노동 강령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상환(2000: 132-139)은 채만수의 비판이 민주노동당 강령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이뤄졌으며, 대부분 잘못된 것이라고 반비판한 바 있다. 여기서는 민주노동당의 강령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비판을 이러한 논쟁으로 일단 대신하도록 하겠다.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은 다시 <표 5>와 같이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

라. 경과

1997년 12월 15대 대선을 앞두고 민중운동 진영에서도 특히 민주노총과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등을 중심으로 독자후보 운동을 전개하던 세력들은 97년 10월 26일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국민승리 21)창립대회를 가졌다. 국민승리 21은 창립선언문에서 "앞으로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에 앞장서겠다"며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조선일보, 1997-10-27).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승리 21에서 출마한 '국민후보' 권영길은 단지 30만 6천여표를 득표하는데 그쳤다.²⁵⁾

대선 이후 국민승리 21은 98년 2월 21일 2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선 대책기구에서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 국민승리 21에 참여했던 정치연대와 전국연합은 서로 다른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후 국민승리 21, 민주노총, 전빈련, 그리고 민중당을 계승했던 진보정당추진위원회(구 진정추)는 1999년 4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를 결성했으며, "노동자가 앞장서는 민중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원칙을 밝혔다(장상환, 2000: 120). 진정추 결성식에서는 권영길 국민승리 21 대표,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양연수 전국빈민연합 의장이 공동대표 선출되었다(한겨레, 1999-4-19).

진정추는 99년 8월 29일 진보정당 발기인대회를 열어(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이 창당대회를 열고 정식으로 출범했으며, 권영길씨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기본 강령과 함께 5대 당면과제가 선정되었는데,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실현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분배 불평등 구조 혁파 △사회보장의 획기적 확대 △평화군축 등이 그에 해당한다.

민주노동당 창당을 전후로 해서 한때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아져,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에 이어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²⁶⁾ 이런 상

25) 국민연합의 창설 과정은 박상병·조현연·조희연(2001: 352) 참고.

26) 1999년 11월 한길리서치의 여론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회의 지지도 27.2%, 한나라당 지지도 24.1%에 이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가 20.9%로 나타나서 자민련에 대한 지지도 6.6%보다

황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1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지만, 애초의 기대와 달리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전국 득표수가 223,216표로 유효 득표의 1.18%의 지지를 획득했고,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의 평균 득표율은 13.1%로서 1992년 총선 당시 민중당이 획득한 평균 득표 6.5%의 두 배를 기록했다(장상환, 2001: 347). 특히나 민주노총 후보는 울산 3곳을 포함해서 총 4곳에서 출마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당선이 유력시되던 울산 북구에서 경선 후유증의 영향으로 600여 표차로 낙선을 하고 말았다.²⁷⁾

민주노동당은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2%를 기록하지 못함으로써 법적으로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조직적 형태를 유지한 채 재창당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마. 의의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현재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 및 그 활동의 의의를 정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잠정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의 그 어느 진보정당 운동보다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소수의 명망가나 활동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대중적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이뤄진 점이나, 다른 보수정당과 구별되는 진보적인 이념과 정책을 견지하면서도 당에 대한 지지율을 높인 점, 또한 단지 선거에 임하는 일회용 정당으로 그치지 않고 대선에서 시작해서 총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진보정당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잠재력이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제도적 현실(이러테면, 지역주의, 1인 1투표 소선거제), 내부적 혼란과 세력간 알력으로 인해서 지난 총선에서 애초에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내내 아쉽게 지적된다. 또한 과거 민중당이 그러했듯이 당이 갖고 있는 진보성을 선거 국면에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슈로 만들어내기보다는 당의 이미지를 좀더 온건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손쉬운 방법을 채택하는 모습은 여전히 발견된다.

결국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는 이후 수년간의 일상활동·투쟁 및 선거 활동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듯하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27) 주요 선거구의 결과는 장상환(2001: 348) 참고.

5. 결론

이 글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회운동권에 의한 정치세력화를 〈한겨레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네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그 추이와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제 사회운동은 단순히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운동권에 의한 정치세력화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그리고 사회적 대중기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4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기술한 내용들을 〈그림 2〉에서 제시한 정치세력화의 조건과 연계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겨레민주당은 87년 항쟁의 분위기가 아직 채가시지 않은 민주화 이행기의 상황에서 출범하였다. 이는 분명히 진보정당 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겨레민주당은 민중의 당과는 또 달리 상대적으로 온건한 전략목표를 제시하면서 기존 야당과의 연대 가능성 자체를 개방하였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대중기반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여서 소수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에 그치고 말았다.

민중당의 경우 민선군부정부로 출범한 노태우정권이 초기의 불안감을 넘어서서 자신감을 갖고 이른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출범하였다(조희연·정태석, 2001, 66). 이 시기에는 체제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도전이 차단당한 상태에서, 기존의 보수정당 중심의 정치틀이 지역주의 정치문화와 결합해서 더욱 확고해진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적 개방화가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변혁운동의 제도정치화 및 진보정당을 통해서 기존 정치틀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선거제도와 정당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지역주의 문화가 더욱 확고해진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판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한 진보정당운동은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개혁민주당은 문민정부라고도 불리는 1차 민선민간정부 시기에 활동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재야·민중운동 단체 외에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민주적 개방성 역시 분명히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성이

나 사회단체의 활성화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결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존 정당에 대한 수혈의 효과를 더욱 크게 가졌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주의 정치문화·정당구조 및 1인 1표 소선거구제로 대표되는 기존 선거제도와 결합해서 그 효과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다른 세 가지 시도와 달리 내생적 정당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개혁민주당은 당시 상대적으로 높았던 언론의 관심과 기대와는 달리 총선에서 사실상 참패하고 만다. 여전히 사회의 균열구조는 계급이나 이념적 정체성이 아니라 지역주의에 의해서 강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또한 개혁민주당은 내생적 정당과 외생적 정당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탓에, 당의 분명한 전략적 목표와 정치적 기반을 분명히 하지 못한 가운데 몇몇 명망가 중심의 정당이라는 성격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정부라고도 불리는 2차 민선민간정부 출범을 전후로 해서만 들어서서 현재까지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국민정부는 사실상 선거에 의한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면에서 분명히 개혁성과 민주성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구조나 선거제도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역주의 정치문화 역시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대중기반이나 사회단체의 능력 면에서는 진보정당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IMF 및 그에 뒤이은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소외된 계급·계층이 기존의 정당들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포기한 상황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졌으며, 또한 민주노동당이 특정한 인물이나 조직세력만이 아니라 기층 민중들의 조직적 참여가 이뤄진 가운데 창당되었다는 점도 획기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도 여전히 보수적·제한적인 정치적 기회구조 등이 유지되는 가운데는 그 힘이 크게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정당들과는 달리 원내진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도 진보정당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평가할 만하다.

한국의 정치가 만신창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정치사회의 주역으로서 정당의 부실과 부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여야를 가르기 어려운 보수일변도의 정당체제 안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대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정치실패로 치닫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현안이라 할 구조조정의 추진이나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 진정 보수와 진보의 논의와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의 출현은 잘못된 정당정치를 바로잡으면서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가 이율배반적임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 정치를 혐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양가(兩價)적 모습이 그 예증이다. 사회운동권의 개혁지향에 대해 기대를 걸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에 대해 순수성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사회운동권에 의한 진보정당 실험이 성공하지 못한 이면에는 기존 정당을 불신하면서도 새로운 정당에 대해서 그것을 검증되지 않은 정당으로 폄하하는 모순적 인식이 개재되어 있다.

사회운동집단들도 자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비교 연구는 사회운동의 제도화가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그 자체가 반드시 정치세력화를 위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권태환·송호근, 2001: 551-552). 우리의 경우 사회운동은 동원화에서 제도화되는 단계에서 '권력의 변화'를 지나치게 지향하는 나머지 시민사회에 그 뿌리를 넓히거나 정치사회를 바로잡는 데 큰 한계를 보여 왔다. 특히 시민진영과 민중진영의 틈새는 정치세력화 이전에 사회운동권의 힘을 집중화하는 데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건설을 체제 개혁과 혁파를 건전 보수와 온건 진보의 틀에서 볼 수 있는 '자유주의적-진보주의적 연합'의(임현진·김병국, 1995)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²⁸⁾

오늘의 정당은 흠이 일찍이 간파한대로 강령 보다 조직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렇듯이 중도통합적인 정당이 보편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아래에서, 한국은 이데올로기 투쟁이 청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과할 진보-보수 정당체제를 가지지도 못했고 또한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권으로서는 지난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사회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진보정당의 구축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운동권으로서는 '사회세력'으로서 독자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만족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정치를 넘어 신정치를 향한 비전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28) 이에 대한 유럽적 맥락에서의 고찰은 "자유-노동 동맹"을 지적한 Luebbert(1991)를 보라.

참고문헌

개혁신당(1995a), 〈당헌〉.

_____ (1995b), 〈‘창당대회’ 보도문〉.

권대복(1985), 《진보당: 당의 활동과 사건관계 자료집》, 서울: 지양사.

권태환 · 송호근(2001), “신사회운동과 정치: 정치세력화의 요인과 쟁점,” 권태환 · 임현진 · 송호근 공편,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세계적 추세와 한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길승흠(1993), “정당정치의 태동과 그 전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편, 《한국의 현대정치, 1945-1948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남식(1984), 《남로당 연구》, 서울: 돌베개.

김수진(1999), “한국정치 균열구조의 전개와 담합정당체제,” 《역사비평》, 제49호.

김용호(2001),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나남.

김재홍(1992), 《한국정당과 정치지도자론: 분단극복의 정치과정 연구》, 서울: 나남.

김정진(1999), 〈한국 진보정당의 연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동아일보, 각호.

민주노동당(2000), 〈민주노동당 강령 및 당헌〉.

민중당, 《전환기의 전망》 각호.

_____ (1990a), 〈민중 · 삶 · 정치〉.

_____ (1990b), 〈민중당 창당대회 자료집〉.

_____ (1990c), 〈민중당 강령 · 기본정책〉.

_____ (1990d), 〈민중당 당헌 · 당규〉.

_____ (1991), 〈새로운 민중정당의 건설로 나아가자〉.

_____ (1997),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 민중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박상병 · 조현연 · 조희연(2001), “‘1차 민선민간정권’ 시기의 국가-제도 정치의 성격과 변화,” 조희연 편,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서울: 나눔의 집.

박형준(1993), “전환기 사회운동의 성격,” 임희섭 · 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서울: 나남.

서중석(1991),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1》, 서울: 역사비평사.

_____ (2000), 《조봉암과 1950년대: 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론과 평화통일론(상)》,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하)》, 서울: 역사비평사.

성경륜(1993), “한국 정당의 흥망성쇠, 1945-1992: 정치사회학적 분석,” 《한국사회학》, 제27집.

- 손호철(1999),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서울: 푸른숲.
- 송남현(1980), 《한국 현대 정치사》, 서울: 성문각.
- 심지연(1991), 《인민당연구》,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윤상철(1998), 《1980년대 한국민주화이행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현진(1993), 《제3세계연구: 종속, 발전 및 민주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0),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한가: 국제경험에 비춘 한국의 현실과 전망,” 《한국사회과학》, 제22권 제1호.
- 임현진·김병국(1991),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국가·자본·노동 관계의 한국적 현실,” 《사상》, 1991년 겨울호.
- 장상환(2000), 《진보정당을 말한다》, 책벌레.
- _____ (2001), “4·13 총선, 진보정당과 시민운동”, 유광무·김정훈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2》.
- 장훈(1995), “한국정당의 대중화를 위한 실천과제,” 《여의도 정책논단》, 1995년 9월호.
- 정태영(1995), 《한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사》, 서울: 한울.
- 정대윤(1988), 〈현시기 새로운 진보정당의 위상과 역할〉.
- 정치개혁시민연합(1995a), 〈창립 선언문〉.
- _____ (1995b), 〈정치개혁시민연합 강화를 위한 제안〉.
- 조대엽(1999), 《한국의 시민운동: 저항과 합의의 동학》, 서울: 나남.
- 조선일보, 각호.
- 조현연·조희연(2001), “민주주의 이행 시대의 시민사회와 운동정치”, 조희연 편,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서울: 나눔의 집.
- 조희연(1999),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그 변화의 전망에 대하여,” 《당대비평》, 1999년 겨울호.
- 중앙일보, 각호.
- 통합민주당(1995), 〈당헌〉.
- 차명제(2001), “신사회운동과 정당정치: 독일 녹색당의 경험,” 권태환·임현진·송호근 공 편,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세계적 추세와 한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장집(1989), 《한국 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서울: 까치.
- _____ (1993), “민중민주주의의 조건과 방향,” 《사회비평》, 제6호.
- 한겨레민주당(1988), 〈창당대회 자료집〉.
- 한겨레신문, 각호.
- 현재호(1996), 〈진보정당 운동의 실패 원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Clemens, Elizabeth S. (1997), *The People's Lobby: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the Rise of Interest Group*

-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verger, Maurice (Trans. by Babara and Robert North) (1976),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Cambridge: Methuen and Co.
- Epstein, Leon D. (1975), "Political Parties," in Frederick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4: Nongovernment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Gamson, William A. (1975),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Boston: Dossey Press.
- Giugni, Marco G. and Florence Passy (1998), "Contentious Politics in Complex Societies: New Social Movements between Conflict and Cooperation," in Marco G. Giugni, Doug McAdam and Charles Tilly (eds.), *From Contention to Democracy*, New York: Rowman and Littlefield.
- Habermas, Jürgen (1981), "New Social Movement," *Telos* 49.
- Janda, Keneneth (1970),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olitical Parties*, Beverly Hills, CA: Sage.
- Katz, Richard and Peter Mair (1995), "Changing Models of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Democracy: The Emergence of the Cartel Party," *Party Politics*, Vol. 1, No. 1.
- Kirchheimer, Otto (1966),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in Joseph LaPalombara and Myron Weiner (ed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Palombara, Joseph and Myron Weiner (1966),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in Joseph LaPalombara and Myron Weiner (ed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uterbach, Richard (국제신문사 출판부역) (1948), 《한국 미군정사》, 서울: 국제신문사.
- Luebbert, Gregory M. (1991), *Liberalism, Fascism, or Social Democracy: Social Classes and the Political Origins of Regimes in Interwar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inwaring, Scott (1992), "Transitions to Democrac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Issues," in Scott Mainwaring, Guillermo O'Donnel and J. Samuel Valenzuela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cAdam, Doug (1996), "Political Opportunities: Conceptual Origins, Current Problems, Future Directions," in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Adam, Doug,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1996),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Framing Processes: Toward a Synthetic,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 Movements," in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lucci, Alberto (1990), "The Democratization of Everyday Life," in John Keane and Phillip Mier (eds.), *Nomads of the Protest: Social Movements and Individual Needs in Contemporary Socie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Meyer, David S. and Sidney Tarrow (1998), "A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in David S. Meyer and Sidney Tarrow (eds.),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New York: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O'Donnell, Guillermo (1996), "Illusions about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7(2).
- Offe, Claus (1990), "Reflections on the Institutional Self-Transformation of Movement Politics: A Tentative Stage Model," in Russell J. Dalton and Manfred Kuechler (eds.),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New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in Western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rtori, Giovanni, (1968), "Political Development and Political Engineering," *Public Policy*, Vol. 17.
- Schmitter, Philippe C. (1997), "Civil Society East and West," in Larry Diamond, Marc F. Plattner, Yun-han Chu, and Hung-mao Tien (eds.),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vol. 2,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Schedler, Andreas (1998), "What is Democratic Consolidations?" *Journal of Democracy* 9(2).
- Stepan, Alfred (1988),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Brazil and the Southern Con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illy, Charles (1994), "Social Movements as Historically Specific Clusters of Political Performances,"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38.
- Touraine, Alain (1985),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Social Research* 52(4).

A Study on Social Movements and Progressive Parties in Korea

Lim, Hyun-Chin*

The roles of political parties are substantial to continuous alternation of power on which the essence of democracy rests. Behind the recent world-wide tendency of de-politicization or anti-politicization lies the untruthfulness and unsoundness of politics of parties. In our case, the massive bases of politics of parties are not enough to accept various kinds of division of civil society following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and even, furthermore, the difference of thoughts and policies of parties can hardly be distinguished.

In Korea it is very hard to distinguish parties as whether progressive or conservative in their thoughts and policies. The appearance of authoritarian regime with anti-communist ideology in the name of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defense, which has distorted the popular representation of democracy through vote and election, rightly resulted in the deformity of structures of parties with deep-rooted conservatism.

Our reality shows that social movements have influence not only on cultural area but political area. However, in spite of the societal transformation from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Field: Social Development, Comparative Sociology, Political Sociology. Major Publication: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Labor Movements in Recent Transitions to Democracy*, 2000, 1; 'Corporatism Revisited: Labor Movements in Korea,' *Social Movements in East Asia*, 2000, 1; 'The State and Society in Democratic Consolidation of South Korea,' *The World After the Cold War: Issues and Dilemmas*, 1999, 4; 'Social and Political Dimension of National Security in Korea, 1948-1999,' *Asian Perspective*, 1998, 4. E-mail: hclim@plaza.snu.ac.kr.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it has been proven very hard for social movements to make political authorities, in terms of structures of political opportunities, structures and abilities of social organization, and massive bases.

Under the world-wide trends of universalization of catch-all parties, without liquidation of old-fashioned ideological struggle, we do not yet have the political system of double parties of progressivism and conservatism. Thus from now on very difficult assignments are burdened on social movements in Korea. They have to increase the massive foundation of social movements in one hand and to construct progressive parties in the other. Since those cannot be accomplished at once, what social movements ought to focus on is strengthening their own capacity as 'social powers' and on that basis, they will be able to propose to Korean people visions of new politics beyond the old politics and concrete programs for the change in future.